

민주, 법사·운영위원장 확보 '군불 때기'

22대 국회 입법 주도권 시동 양극법 등 줄줄이 제동 경험 輿 반발 불보듯... 쟁탈전 예고 원 구성 놓고 충돌 가능성 커

4·10 총선에서 175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장과 운영위원장 확보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통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은 원내 제2당이 맡고, 국회 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게 관례였지만, 이번 총선의 민심을 받들어 국회 운영을 다수당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라디

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더해 운영위원회도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며 22대 국회에서 입법 주도권을 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은 상하원 모두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 책임 정치인 거다.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을 가진 정당이 정권을 독점하지 않느냐"면서 "국민의 민의에 따라 국회 운영도 다수당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맞다. 원칙적으로 미국식 방식을 도입하지는 분들도 계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통상 원내 2

당이 맡은 법사위원장에 대해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총선의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내준 뒤, 양극관리를 비롯해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추진하는 핵심 법안들 마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다수당의 지위로 국회법상 60일 이상 계류된 직후 각 상임위에서 가능한 본회의 '직회부'와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대상으로 지정하는 우회적 전술을 썼지만, 제법 법안을 올리지 못해 동력이 상실됐다.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법사위원회 문제다.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갖고 법적 절차, 입법 과정의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전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만 들어 났다"며 "관련 국회법도 제시한 바 있는데 법사위 자체를 사법위원회로 바꿔서 지금과 같이 상원(의회)처럼 대선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 오게 되면, 야당이 추진하는 핵심 법안들이 빠르게 본회의에 상정되고, 다수당인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적시에 본회의를 여는 식으로 각종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75석을 얻어 본회의의 법안 통과 기준인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조건을 충족한다.

민주당은 오는 5월 3일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새 원내 지도부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 다수당 견제를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1당과 2당이 나눠서 맡아야 한다는 논리로 원구성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거대 양당의 법사위원장 쟁탈전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아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양당이 원구성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커 '지각 개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이화영 회유진술 조작' 진상조사기구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밝힌 '회유진술 조작'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기구를 구성기로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이화영 전 부지사를 모아놓고 회유 진술 조작 했던 논란의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얘기한 술판 회유는 100% 사실로 보여진다. 검찰이 진술 회유 조작을 하는 것 아니겠나. '모아 놓고, 술판 벌이면서 회유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 이게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진상조사기구에 대해 "1313호 앞 창고 CCTV를 공개하라고 검

찰에 요구할 것"이라며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이들의 출정기록을 공개하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담당 교도관도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변호인 측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술을 마시기도 했다"면서 "쌍방울 측 직원이 사 왔던 거 같다. 구치소 내에서 먹을 수 없는 성찬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낙연 "총선 패배 책임, 비대위 운영"

당 지도부·당직자 사퇴

이낙연(사진)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17일 4·10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와 모든 당직자가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4·10 총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참패했다"며 "당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찾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 운영을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하고, 책임위원회의

를 통해 제안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지도부를 포함한 여러 지도자, 관계자들과 만나 당의 현실과 미래를 상의했다"며 "그 결과 당직자 총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에 의견을 모으고, 비대위원장은 제가 지명하도록 위임 받았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김종민의원이 세종갑 지역구 의석을 확보했지만, 비례대표 투표에서 1.7% 득표율을 받아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광주·대구시 '달빛산업동맹 실무협약체' 발족

광주와 대구가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엔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와 대구시는 17일 남원시 남원아트센터에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달빛산업동맹 실무협약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엔 발족한 달빛산업동맹 실무협약체는 양 시의 기획조정실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협력과제 부서장으로 구성됐다.

협약체는 지난 2월 달빛고속화철도 경유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결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엔 속도를 낼 예정이다.

주요 협력과제는 △달빛고속화철도의 조속한 건설 △달빛첨단산업단지 조성 △국가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지역인재 육성 △2038하계아시아안개 임 공동 유치 등이다.

양 시는 현안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해 협력과제를 지속해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상호 공유하며 사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원장이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13조 등 긴급조치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린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드린다"고 윤석열정부에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을 외치고 있다.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다.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 수도 있다"며 "민생의 어려움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 불어넣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적극 재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며 "민생회복 지원의 주요 내용은 선

거 때 말씀드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원 정도,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에 약 1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금리 대한대출을 2배 정도 확대해야 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약 4000억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약 300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광주시, 문화콘텐츠 코어기업 유치 '시동'

콘텐츠기업유치협의체 발족 벤처 기업 자본 4개사 참여

광주시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내 기업 유치를 위한 '콘텐츠기업유치협의체'를 최근 발족하고 문화콘텐츠 기업 유치를 본격화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콘텐츠기업유치협의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펀드에 참여하고 있는 미시간벤처캐피탈, 키로스벤처투자, 한국가치투자, 오라클벤처투자 등 벤처 기업 자본(벤처 캐피탈) 4개사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기존 기업유치 설명회 등 행사 중심의 유치 활동이 아닌 핵심 역량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및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 정보수집 채널 네트워크를 가동해 기업유치 활동을 펼친다.

기업유치 관련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현재 운용 중인 3개 투자조합(미시간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투자조합, 웰투시-KVI 아문단펀드 1호, 오라클아문단펀드)과 연계한 기업이전 상담(컨설팅), 광주콘텐츠산업 환경 홍보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강소기업과 전략기업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기업 투자유치 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투자유치설명회와 사전답사를 추진하고, 투자진흥지구입주

기업에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기업금융 등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의 특전(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투자진흥지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 CGI센터권역, 아킴보호호텔(라마다 총장) 등 3개 권역이 지정돼 있으며, 147개 기업 958명이 종사하고 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콘텐츠기업유치협의체가 지역 강점을 활용한 기업유치와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신규기업 발굴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를 비롯한 다양한 기반시설과 인력양성 플랫폼, 투자조합 등 광주 핵심자산을 활용해 신규기업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